



##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성명서 관련

- ① 원자력학회에서는 원전의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만을 주장하나,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.
  - 원전 건설로 인한 사고 위험 비용, 사회적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함.
  -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.
- ②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'22년 원전은 27기로 늘어나며 향후 60여년간 원전이 계속 가동되므로, 원전 설비 공급망은 유지 가능함.
  - 또한 노후 원전 계속운전 금지는 원전 밀집, 다수 호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임.
  - 독일, 프랑스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나라들에서도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음.
- ③ '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BAU 대비 26.4% 감소한 2.37 억톤으로,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.
  - \*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발전부문 BAU는 3.22억톤, 감축 목표는 19.9%
  - 원전 발전량이 축소되는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고,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, 석탄발전소에 대한 성능 개선 및 LNG 연료 전환, 환경 비용 및 세제 조정 등으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할 전망.
- ④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원믹스 변화와 무관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은 제외하고, 전력 구입비를 대상으로 분석함.
  - 또한, 주요 전문가관의 전망을 토대로 미래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률을 반영하는 등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함.
- ⑤ 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, 중간 결과의 공개,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계획으로 정부가 짜맞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.
  - 8차 수급계획(안)은 원자력학회 관련 인사를 포함, 7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.
  - 수요 전망, 적정 설비에비율 등 중간 결과에 대해서도 5차례 공개함으로써 국회, 언론, 시민·환경단체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.
  - 향후에도 국회 보고,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8차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.